

#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편?…2015년 선관위안 주목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20대 국회 후반기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동영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평화당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유지를 받들어 정치개혁에 사활을 걸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이른바 ‘민심 그대로’의 정치를 위해 유권자 지지율과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 간 괴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취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존재 이유”·이정미 “노회찬 사명” 한목소리

민주당 ‘국회합의’ 신중모드 속 한국당 ‘개헌공조’ 전제 미온적

정당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인이 그에 모자라면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 면적을 확대하되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해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원내 300석 안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의 활동기한 만료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댕긴 것은 평화당 정동영 대표였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당 존재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기조도 평화당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평생 사명이었던 정치개혁을 위해 사활을 건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의원정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의석수를 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를 주도해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조만간 구성될 정치개혁특

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편이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수 획득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이 20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지도부의 입장이 긍정적이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2일 국회방송과의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과도 같은 원칙”이라며 “거의 합의안이 있고 문제는 결단이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거대 양당이 얼마나 호응하느냐

가 핵심 변수가 되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 관측이다.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은 최근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당제를 원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내실 구체적인 논의를 서두를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정계특위에서 논의해 국회가 합의하면 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 “농림부 고위직, 호남 인사패싱 심각”

박주현 “영남출신 호남의 4배…지역안배 제도개선 절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3급 이상) 중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밝혀져 호남에 대한 현 정부의 인사패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3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달 현재 고위공무원 총 41명 중 영남 출신 22명, 호남 출신 6명으로 3.7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영남 22명(53.7%) ▲호남 6명(14.6%) ▲충청 4명(9.7%) ▲서울 4명(9.7%) ▲강원 3명(7.3%) ▲경기·제주 각 1명(2.4%) 순으로 나타났다.

도별로는 ▲경북 16명(39%) ▲경남 6명(14.6%) ▲서울·충북 각 4명(9.7%) ▲강원·전북·전남 각 3명(7.3%) ▲경기·제주 각 1명



(2.4%)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농업·농촌을 책임지는 농림부 안에서 호남출신에 대한 인사패싱이 심각하다는 것은 호남출신 이개호 장관 후보가 농림부 내 지역 갈등을 해소하면서 농업·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소임을 수행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인재가 영남에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어려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사의 적절한 출신지역 배분이 필요하다”면서 “내부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정동영 “선거제도 개혁 5당 연대 만들겠다”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예방…현충원 찾아 DJ·YS 참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5당 연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뜻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며 문 의장께서 앞장서신다는 말을 강조했다”며 “대통령의 철학과 국회의장의 신념, 여기에 여야 5당이 처한 입장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선거개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바꿔서 농민당과 청년당, 여성당, 환경당, 소상공인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면 대한민국이 확 열린다”며 문 의장과 함께 5당 연대를 만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의 취임 축하난을 전달한 박수현 실장은 정 대표가 전날 ‘현장 1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 의장이 “감명 깊었다. 정 대표의 지도력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후 정 대표는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조국을 위하여 목숨 바치신 선열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적었고, 고 김대중(DJ)·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묘소를 잇달아 참배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10일 청와대 5부 요인 초청 오찬

‘문 의장 취임기념’ 한반도 평화·국정운영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여권 관계자는 7일 “문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을 기념해 5부 요인과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최근의 안보상황이나 문재인 정부 2기의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문 의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15일 문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치를 강조한 국회의장 당선소감이 시의적절했다. 신임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 민생경제법안 TF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연합뉴스

## 내년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자동차 운행제한

‘미세먼지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도

내년 2월부터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강병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비상저감조치는 1년 중 며칠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장관은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차량의 친환경차 전

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하려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돼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 정부, 전두환 제정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0년 전후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당시 북무한 군인·군무원·공무원·주한 외국군인 등 총 79만9,693명에게 수여한 국난극복기장의 근거 법령이 폐지됐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난극복기장령(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난극복기장령은 1981년 3월 2일

제정돼 제5공화국 출범일인 1981년 3월 3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월 26일부터 계엄령 해제 이후인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해당기간에 근무한 군인 등에게 국방부장관이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하도록 했다.

국난극복기장은 일종의 ‘기념장’이어서 부가혜택은 없다.

국방부는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

류가 있고, 기장수여가 모두 종료돼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리자의 훈·포장·표창이 취소됐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법령유지에 실익이 없어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국난극복기장령이 폐지됐으나, 기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또 국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등의 포상금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후납북자법 개정안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정비하는 내용의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를 조만간 국회로 넘긴다.

정부는 이날 법률 개정안 2건, 대통령령 개정안·폐지안 9건과 함께 법률 공포안 37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